

폭염 전면전… 서울시, 쉼터 4000곳 운영·야외작업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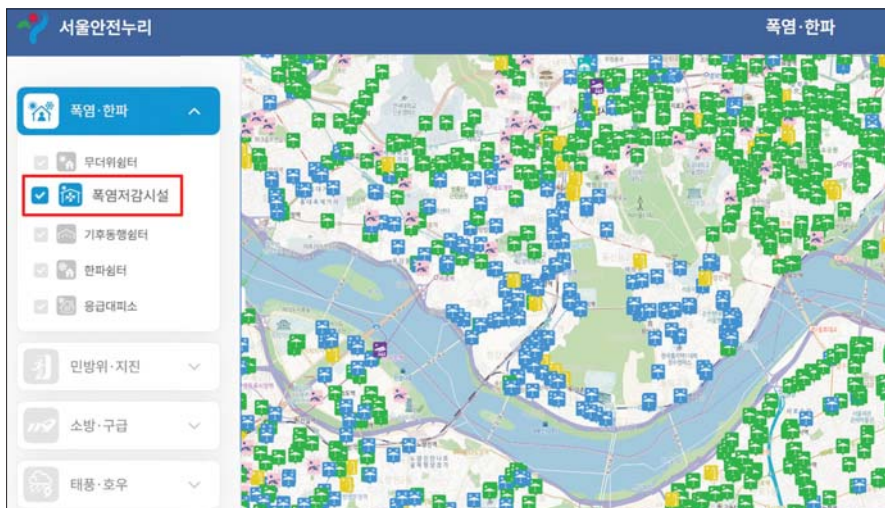
노숙인·쪽방주민 대피공간 가동
노동자 쉼터·얼음물 지원하고
도로 물청소 하루 6회로 확대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이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취약 어르신 약 5만명에게는 매일 또는 격일로 안부전화가 간다.

서울시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와 무더위쉼터 4000여곳 운영 등을 포함한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에는 지난달 18일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지난달 29일과 이달 10일, 23일 등 네 차례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지난 24일 기준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은 모두 12일이다.

시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응급구호반과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노숙인 무더위쉼터 11곳과 쪽방촌 무더위쉼터 8곳, 밤다위 대피소 6곳을 마련하고 구호물품과 식수를 제공한다. 방문간호를 통해 건강 상태도 확인한다.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서울안전누리 폭염저감시설 안내도

/서울시

건강 취약계층은 전화와 방문을 통해 관리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취약 어르신 약 5만명에게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전화한다.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핀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에너지바우처를 연계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19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원 늘었다. 여

름철 에너지바우처는 7~9월 전기요금에 자동 적용된다.

건설공사장과 공공일자리 사업장, 환경미화 현장 등 야외 작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폭염경보 때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중지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멈춘다.

건설공사장에서는 휴게시설 운영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교육 실시 상황을 확인한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서는 쉼터 30곳을 운영한다. 7~8월에는 일부 쉼터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얼음물 약 10만병을 지원한다.

시민이 생활권 안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등에 무더위쉼터 4000여곳도 운영한다. 지하철 1~8호선 지상 21개 역에는 '동행 쉼터' 40곳을 운영한다.

폭염특보 기간에는 자치구 청사를 24시간 개방한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청사를 사용 중인 강북구는 청사 공간이 협소해 응급대피소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시설도 확대한다. 시청역~송례문 등 주요 구간에 설치된 쿨링로드는 신규 구간을 포함해 19곳, 총 5.67km로 늘린다. 쿨링포그는 기존 187곳에 53곳을 추가하고, 횡단보도와 광장, 공원 등의 그늘막도 확충한다.

야외 무더위 대피공간인 '해피소'는 광

화문광장과 도봉구방학사계광장 등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이를 모두 14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 물청소도 늘린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 2163km 구간에 물청소차 199대를 투입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하루 1~2회 물청소를 실시한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1곳과 연계해 운영한다. 소방구급대와 펌블런스에는 응급처치 물품을 비치하고, 쪽방촌과 복지관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며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쉬고, 증상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공교육 진학상담 늘린다

잠실학생체육관서 2040명 상담
현직 교사가 대입 지원 전략 제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시행에 맞춰 공교육 진학상담을 확대한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대면상담 2040명과 화상상담 600명 등 수험생·학부모 총 2640명에게 무료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면서 민간 입시업체의 학생부 활용에도 제약이 생겼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직 교사를 활용한 상담과 입시자료 제공을 확대해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와 진학 정보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수시 대비 집중상담주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운영된다. 서울 지역 고3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에게 1대1 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교육 썸TV'에 공개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분석·지원전략 영상

/서울시교육청

상상담을 제공한다. 대학진학지도지원단과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들이 인문·자연계열과 의약학, 특성화, 예체능 등 계열별 지원전략을 상담한다. 신청은 8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11시까지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대면상담인 '수시 대비 1대1 특별진학

상담센터'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상담 대상은 지난해 1500명보다 540명 늘어난 2040명이다. 신청은 지난 13일 마감됐다.

교육청은 진로 탐색과 고교 과목 선택, 대학 지원전략을 연계해 상담한다. 이를 위해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 114명과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교사 100명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상담에는 '썸(SEN)진학 교사용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수시모집에 대비해 자료집 4종과 온라인 동영상 12종, 오프라인 설명회 영상 5편도 제작했다. 자료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과 유튜브 '서울교육썸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용 '썸진학 나침반' 웹과 앱에서는 진로 탐색과 성적 관리, 과목 선택, 대학별 전형 정보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년과 시기에 맞는 진로·진학 상담을 공교육 안에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6곳 선정

경희대·전주비전대 '대상'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창업, 지역 정착을 지원한 우수대학 6곳을 선정했다. 일반대 부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역량을 단계별로 인증하고 이를 취업에 활용하도록 한 경희대학교가 대상을 받았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2곳과 우수상 4곳을 선정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대 부문 대상은 경희대, 전문대 부문 대상은 전주비전대가 받았다. 우수상에는 강원대와 경성대, 충남대, 경북대가 선정됐다.

경희대는 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인 'KHU-PASS'를 도입했다. 한국어와 진로 설계, 글로벌 경험,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의 이수 결과에 따라 유학생의

역량을 단계별로 인증하고, 관련 정보를 이력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로 발급했다. 디지털 배지는 학기당 185건 발급됐으며, 관련 프로그램 참여 건수는 학기당 196건에서 527건으로 늘었다.

다른 수상 대학의 주요 사례는 ▲전주비전대(해외 새만금 한글학과와 한국어·문화 사전교육, 지역 정주 프로그램 운영) ▲강원대(지역기업 등과 연계한 실무교육과 인턴십을 통해 19개 기업과 유학생 27명 연결) ▲경성대(부산시·지역기업 43곳 등과 협력해 취업박람회와 한국어·사회통합 교육 운영) ▲충남대(취·창업 교육부터 기업 실무실습과 채용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경북대(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 산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취업과 정주를 지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사례를 대학 현장에 확산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창업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산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로림만,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인정

천혜의 해양 생태계를 간직한 충남 가로림만의 서산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대상지인 가로림만이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공인받으면서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충남도는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안이 최종 의결돼 서산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2021년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이번엔 서산갯벌과 전남 여수·고흥·무안 갯벌이 추가됐



가로림만 갯벌 전경. /충남도청 누리집 갈무리

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서산갯벌이 생물다양성과 이동성 조류의 먹이터이자 중간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서산갯벌을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생산적인 갯벌 생태계 가운데 하나이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핵심 지역으로 평가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부산시, 해양수도전략실 신설로 미래 준비

북극항로·투자유치 총괄

부산시는 민선 9기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수도 전략을 총괄하는 해양수도전략실을 신설한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연계해 북극항로 개척과 국제 해양협력, 투자유치 기능을 통합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양분야 정책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해양수도전략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조직 직급도 상향 조정한다.

해양수도전략실은 경제부시장 산하에 배치된다. 경제정책실과 AI산업혁신국, 신공항국 등과 함께 부산의 미래 성장 전략을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운영된다. 산하에는 북극항로추진과와 해양수도세일즈과를 둔다.

북극항로추진과는 북극항로 개척 종합계획 수립과 해양수산부 협력, 시범운항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전담한다.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부산시

도 전담 조직을 통해 정책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도세일즈과는 해외 주요 해양도시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일즈 외교를 추진한다. 글로벌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넓히고 국제 해양행사 유치 전략도 함께 밀어 부산의 국제 해양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산업 투자 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이 해양수도 실현과 민생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실행 중심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가동되면 정부 정책과의 연계는 물론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클러스터 조성에도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